



# 주간 통일정세

2013-18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北 총리, 노동절 맞아 "핵·경제 병진노선 관철" 강조(종합)(5/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1일 노동절 행사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박 총리는 이날 황해도 송림시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린 5·1절 123돛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박 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노동절 맞아 인민보안부 시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보안원과 인민내무군 장병과 기념촬영을 하고 인민보안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았음.
  - 인민보안원은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의 경찰격이며 인민내무군은 북한의 주요공사현장에 투입되거나 주요시설물 관리 등의 임무를 맡고 있음.
  
- **北 김정은 '해외파견 근로자' 이례적 칭찬(5/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해외에 파견한 일군과 근로자를 이례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 공원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일꾼과 근로자, 군 장병에게 보낸 감사문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림.
  - 김 제1위원장은 감사문에서 "공사기간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전국 각지의 인민들, 해외에 파견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양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전투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여 건설자들의 노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했으며 공원 꾸리기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희귀한 화초와 나무, 설비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왔다"고 칭찬함.
  
- **北 김정은, 노동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관람(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공연 중인 노동절 기념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치고 "당의 노선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변



하고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 믿음직한 선전자"라며 악단에 감사를 전달함.

- 이날 음악회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전창복 군 상장(우리의 중장), 강필훈·럼철성·박정천 군 중장(우리의 소장) 등이 함께함.

● **北 김정은 첫 비서실장에 김창선...의전까지 맡아(5/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에 김창선 전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서기실 부부장을 지낸 김창선이 작년 초부터 김정은 서기실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잡지 "김정은, 작년 국제기호·단위 사용 지시"(5/5, 연합뉴스; 문화어 학습)**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이 지난해 국제공용 기호나 단위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지 '문화어학습' 최신호(2013년 2월 27일 발행)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언어생활 분야에도 구현하시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어생활 분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공용기호와 단위를 국제적 관례대로 쓰도록 하신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주민이 보낸 편지에 '친필' 답장(5/5, 노동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민이 보낸 편지에 '친필' 답장을 보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철도성 청년돌격대여단 3세대 박성민 참모장 등이 보낸 편지를 보고 친필 답장을 보냈다고 사진과 함께 소개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가족이 죄를 지어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노동당에서는 대대 참모장을 맡겨주고 김정일청년영예상까지 수여했다는 박성민 참모장의 편지에 '숨기고 싶었을 집안의 과거를 스스로 없이 터놓고 당을 믿고 따르는 좋은 청년입니다'라고 친필을 보냈다고 신문이 전함.

● **北 김정은, 잔디연구소 시찰... "맨땅에 잔디 심어라"(5/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침땅(경작지)을 제외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거나 풀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시로 군인들이 평양 부근에서 3개월



만에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방문해 "꽃과 지피 식물을 심어 빈땅이나 잡초가 무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 김정은동향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4.29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1급 남자축구 결승전(김일성경기장, 리명수팀↔압록강팀) 관람(4.3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주규창·최부일·김동일 등 관람
  - 김정은, 4.29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김금옥·양경일·리세광·황룡학·박영미·홍국현·리수연·권용광·박정주)과 김일승 감독 및 체육지도 일꾼들 접견(4.30,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최부일 등 참가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양각도축구경기장(\* 축구 전용구장으로 개건 지시) 시찰(4.3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리영길 등 동행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희숙(우시군 상업관리 소장)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4.30,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30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 조성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에게 감사문 전달(5.1,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감사문 전달모임, 4.30 현지에서 진행(4.30, 중방·평방)
    - 김영남(감사문 전달),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원홍, 김양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로두철, 최부일, 태종수 등 참가
    - 黨 중앙위, 4.30 '진명호' 선원들의 100항차 대외화물수송 보장에 대한 감사문 전달(5.1, 중통)
    - 감사문 전달모임, 리용남(무역상) 등 참가下 진행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리설주와 함께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 관람(5.2,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양건 등 관람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보안부 방문 및 제2219군부대시찰(5.2,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동행 및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병삼(정치국장) 등 현지 영접
- 5/1, 김정은 黨 제1비서, 5.1 '비전향장기수 한창호'에게 90돌 생일상 전달(5.1, 중통)



- 5/4, 김정은 黨 제1비서, 5.1절 즈음 인민극장에서 은하수음악회 관람(5.4,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격식, 황병서, 강필훈, 럽철성, 조경철, 김영철, 박정천, 전창복과 평양시 근로자들 등 함께 관람
- 5/5, 김정은 黨 제1비서, 철도성 청년돌격대여단 3대대 참모장(박성민) 등 편지에 대한 '친필' 전달(5.5,중방)
- 5/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평양시 교외) 시찰(5.5,중·평방·중통)
  - 최룡해, 최태복, 박태성, 황병서 등 동행 및 군부대 지휘관들 현지 영접
- 5/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은하수관현악단 창작가·예술인들에게 보낸 '감사(\*5.1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기여 치하) 전달 모임, 5.5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下 은하수극장에서 진행(5.5,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지구청년관광연합기업소(28직동청년관광 등) 석탄생산실태 현지 요해와 순천화력연합기업소 방문 및 '문제점' 협의(4.29,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 건설장' 현지요해(5.3,중통·중방)
    -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 토의

나. 경제

- 北 "자급자족 위해 새 땅 찾자"...농경지 확대 독려(4/29, 노동신문)
  - 북한이 파종기를 맞아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농경지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1면에 실린 '새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 시기 세계적인 식량 사정이 보다 긴장해진 조건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자면 한평의 새땅이라도 더 많이 찾아 곡식을 심고 가뭄 나라 쌀독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모든 농촌들에서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모조리 찾아 개간하여 강냉이를 비롯한 곡식을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논밭 가운데 있는 건물들을 산기슭에 옮기고 봄갈이를 다그쳐야 하며 필요없는 도로, 물길, 양수장을 정리하여 포전으로 만들어 곡식을 심어야 한다"고 독려함.



- "모내기 준비 총력"…北, 5월 들어 '영농전투' 독려(5/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북한이 5월 모내기철을 맞아 증산을 위한 '영농전투'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여기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모든 북한 매체들이 동원되고 있음.
  - 노동신문은 3일 "봄철 영농전투로 사회주의 협동벌이 들끓는다"면서 두면에 걸쳐 철저한 모내기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과 모범사례 등을 대거 실었음.

#### 다. 사회·문화

- 北, 작년 국제특허 2건 출원(4/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해 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북한은 작년 3월 '공개자료를 이용한 개인교습체계의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동물의 뼈를 이용한 유산균 우유 제조법'의 특허를 출원함.
  -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없는 상태임.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인사 "미국이 원수님 우습게 봐 대화제의 거부"(4/29, 연합뉴스; 민족통신)
  - 림 부원장은 28일 민족통신을 통해 북한이 미국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배경을 묻자 "우리 원수님의 결심은 단호하셨다"며 "우리 원수님(김정은)은…미국이나 적대세력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층 더 단호한 결심을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 대답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인 조국통일연구원의 림용철 부원장이 최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특파원 노길남씨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임.
- 北,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에 15년 노동교화형(종합)(5/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함.

● **北-EU 작년 교역액 절반 이하로 급감(5/3,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규모가 전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EU의 지난해 교역액은 6천900만유로로 전년(1억5천900만유로)의 43.4%에 불과했고, 수출액이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 EU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년(1억1천700만유로)의 20.5% 수준인 2천400만유로로 나타남.

● **미국, 북한에 배준호 씨 사면·석방 공식 촉구(종합)(5/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사면과 석방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배씨에 대한 사면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함.
-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북한 사법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대북특사 계획없다는 중국...북한과 '냉랭'(5/3,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과 위협공세로 지난해 말 중단된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나아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인 북중 관계 정상화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 도발의 명분인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달 종료되고 북한의 공세 수위도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관측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다름.

● **핵실험 이후 주춤했던 북·중 민간교류 활기(5/3, 연합뉴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육 등 민간 분야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3일 제남시보(濟南時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주춤했던 북한 인사들의 방중과 중국 내 북한 예술품 전시회 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전창효 부교장과 최고교육위원회 홍성남 독학 등 예술교육계 인사 6명은 지난달 24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음악학원을 방문해 친선교류 활동을 진행함.





- **北, 日 개헌 움직임 비난…"전쟁헌법 시간문제"(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본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일본에서 전쟁헌법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극우익으로 맹질주하는 일본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를 지난 70여 년 전의 전쟁국가를 연상시키는 극우익 풍조로 물들이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제96조를 개정해 개헌 발의요건을 낮춰 헌법 9조를 개헌하려고 한다고 지적함.
  
- **北, 조총련계 상공인 박희덕 유해 열사릉 안치(5/3, 조선중앙통신)**
  - 박희덕 전 재일본 조선상공연합회 고문의 유해가 3일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 고문의 안치식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화환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통신은 "박희덕이 (조)총련 결성 초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재일 조선인운동과 총련의 강화발전,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했다"고 강조함.

■ 기타 (대외 관계)

- 北,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12년 11.3 北 억류)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4.30, 최고재판소 재판)" 선고(5.2,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미사일 발사 신호 중단"(4/29,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 발사 준비 작업을 일단 중단했고 미군도 감시 태세를 한 단계 완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한·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궤도 등을 지상 기지에 전하기 위해 발신하는 원격정보(telemetry)와 지상 기지의 통신 관제 레이더 전파 등이 지난 20일째부터 한·미·일 측에서 수신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전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험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 북한은 이달 초 무수단 미사일 2기를 강원도 원산 북쪽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옮기고 나서 연일 무수단과 지상 기지 통신·레이더 등 기지 내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옴.
  
- **北 "美, 한반도 핵위기 근원청산 용단 내려야"(4/30,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함.



- 이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노동신문이 매일 논평원 개인의 실명으로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논평원의 글'은 이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논평원의 글'에 대해 "대외관계 면에서 볼 때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 있는 글"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 北신문 "美, 상대 존엄있게 해야 대화 가능"(5/2, 민주조선)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바란다면 대화 상대인 우리를 존엄있게 해야 한다"고 2일 주장함.
- 민주조선은 이날 '대화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존엄 있는 주권국가이고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해도 평등한 관계에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엄연한 핵보유국인 만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에서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또 그 길만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의 유일한 길임을 미국은 꼭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함.

### ● NPT 준비회의 "北 추가도발 자제 촉구"(5/4, 연합뉴스)

- '2015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네바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북한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요약문(Chairman's factual summary)이 채택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결과문서인 의장요약문에서 "북한은 지역과 그 주변에서 안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 北 탄광지역에 생존 국군포로 113명 명단 확보(4/29, 연합뉴스)

-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내 송환운동을 벌이는 단체인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는 29일 중국과 가까이 있는 북한의 탄광지역에 국군포로 113명이 생존해 있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이 단체는 이날 낸 자료에서 지난 2월 현재 함경북도 셋별군에 있는 고



건원 노동자구에 58명, 하면 노동자구에 32명, 룡북 노동자구에 9명, 함북 온성군에 2명, 자강도 교회소(교도소)에 1명, 행방불명 11명 등 국군포로 생존자 113명의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했지만 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함.

- 北 "전작권 환수 연기 움직임은 북침야망 책동"(5/1, 노동신문)
  - 한미 양국 일각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비난함.
  - 노동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며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매체 "빠라살포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5/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탈북자단체 등이 오는 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빠라살포로 하여 초래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를 모독하는 너절한 종이장이 단 한 장이라도 우리 하늘을 어지럽히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힘.

#### 나. 경제·사회·문화

- 北 "南 사태악화 추구하면 개성공단에 결정적 조치"(4/29, 노동신문)
  - 북한은 29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 제목의 글에서 "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이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남측 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폐쇄와 같



은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北 "남이 개성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치 않을 것"(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0일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히 깨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민주조선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깨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민주조선의 이런 언급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것이지만 북한이 현 상황에서 먼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北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개성공단 파국 주범은 미국"(5/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미국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실질적인 장본인, 진범인"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업지구에 뺨친 미국의 검은 마수리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서울에 기어들었던 미 국무부 부장관이란 지는 괴뢰들이 그 무슨 '중대조치'요 뭐요 하면서 공업지구 안의 저들 인원을 철수시킨 데 대해 '전적인 지지니, '이해'니 하며 적극 부추켜댔다"며 "결국 개성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괴뢰들의 책동이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힘.
- **초코파이, 평양서 전설적인 지위에 오르다(5/2, 가디언)**
  -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초코파이가 북한 주민을 새로운 맛의 세계로 인도하며 평양에서 거의 '전설적인 지위'(legendary status)에 올랐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함.
  - 초코파이는 남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해왔으며, 북측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개성공단 사업주들은 물품으로 대신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
- **北, 개성공단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허용 가능성(5/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북한은 개성에서 진행중인 남북 실무협약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우리의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여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못박지도 않았다"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北 "개성공단 사태는 남한 책임" 거듭 주장(5/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인 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남측 인원들의 전부 철수 등 공업지구 폐쇄 책동에 날뛰고 있는 괴뢰패당이 우리에게 대한 책임 전가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힘.
  -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폐쇄 직전에 이른 개성공업지구 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우리를 계속 걸고 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과 지난달 22일 통일부 대변인의 통행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증가 언급을 지적함.
  
- **北에 1천300만 달러 지급...개성공단 7명 귀환(종합)(5/3, 연합뉴스)**

  - 개성공단 실무협의 타결에 따라 현지에 남아 있던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이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원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우리측 인원의 조기 귀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북측이 주장한 '미수금'을 이날 지급했으며 김호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 직원 5명은 이날 오후 현금수송차량 2대를 이용해 방북, 북측에 미지급금을 전달하고 귀환함.
  
- **北매체 "개성공단 완전폐쇄 南태도에 달려"(5/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4일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폐쇄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괴뢰 패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재차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를 오늘과 같은 첨예한 동족대결의 마당으로 만든 범죄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이같이 강조함.
  - 논평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내올 때 그 어떤 이익이나 덕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며 "오직 동족대결을 끝장내고 통일을 떼밀어주는 화해와 협력의 상징, 평화변영의 기초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었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먼저 적대행위 중지해야 개성공단 정상화"(종합)(5/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지 이틀 만인 5일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진정으로 걱정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두렵다면 사태의 근원으로 되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기타 (대남 동향)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발간(5.1), 現 한반도 사태 관련 '韓美의 유엔 안보리결의 2087호(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제재)가 파국의 악순환 길에 들어서게 된 시발점'이며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이 북침핵시험 전쟁'이라고 왜곡 주장(5.1,중통/조선반도 긴장격화와 핵전쟁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중 연쇄접촉...한반도 정세전환 시도>(5/1, 연합뉴스)
  - 북한이 위협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전환을 위한 관련국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음. 북한의 위협이 최근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이 연쇄접촉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한·미·중 3국은 지난달부터 고위급 접촉을 이어왔음.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13일 베이징에서 각각 한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음.
  - 이어 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미, 지난달 22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도 2일 베이징에서 만난다. 이를 위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출국했음. 임 본부장은 지난달 1일 워싱턴을 방문해 데이비스 대표와 회동한 바 있음.
  - 한·미·중 3국은 이런 고위급 연쇄 접촉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정세 전환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중단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른바 '대화의 조건'을 놓고 관련국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깔끄러워진 북중 관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음.
  -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많음. 정부 소식통은 1일 "북한이 중국의 특사를 받느냐가 한반도 정세전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 특사를 수용한 것은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다만, 한반도 정세 전환의 속도와 방향은 북한의 태도에 달렸음. 이런 점에서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최근 이전보다 낮아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됨. 그러나 정세 변화를 위한 대화 탐색전에 진입하려면 북한의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미국 내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사람들의 씨가 말라 버린 분위기(정부



- 고위관계자"로 전해진 상황에서 냉각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향방이 1차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잔류 인원 채널을 통한 남북 협의에서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한반도 정세 전환 움직임도 탄력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들어간다면 한반도 정세 해빙은 좀처럼 점칠 수 없게 됨.
  - 워싱턴에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도 주목됨.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개성공단 사태의 진행 방향에 따라 한미 정상의 대북 메시지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당분간 주변국 움직임을 관찰하는 가운데 다음 수순을 검토할 전망
- <北경수로 가동 임박 관측 주목...실제 가동 불투명>(5/2, 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내년 초 영변에 경수로 발전소를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됨. 북한은 영변에 기존의 흑연감속로 외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음.
  - 미국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인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 경수로 건설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 중반 시험 가동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 북한이 실제로 실험용 경수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북한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
  -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수로라는 첨단 전력생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김정은 체제에는 내부적으로 민심을 장악하는 업적을 새로 추가하는 셈임.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을 명시한 바 있음.
  - 경수로의 전력생산능력이 크지는 않아 전력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실험용을 넘어선 상업용 경수로 건설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증산의 토대를 갖추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대내적인 의미보다 대외적 메시지가 더 큼. 우선 경수로를 가동하려면 핵연료봉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 농축 능력을 과시하게 됨.
  - 경수로 발전소도 폐연료봉에서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한 만큼 전력생산보다 핵무기 원료 생산에 주력하면 핵폭탄을 만들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임.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수로 기술은 이제 오래된 기술이라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전용 시 북한의 핵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러나 북한의 경수로 가동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





도 나오고 있음. 일단 북한의 내년 상반기 가동을 예상케 한 위성사진이라는 것이 평면적이어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임.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수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수로인지 또 다른 원자로인지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이 가동하더라도 흑연감속로와는 달리 피복제 등이 필요한 경수로용 핵연료를 만들었는지 의문이고 기술 수준이 떨어져 경수로의 안전한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 영변 핵시설을 직접 봤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 2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수를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가동 중인 경수로도 직접 관찰하고 해야 하는데 북한은 고립되어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춘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수석대표는 "북한이 경수로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에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연구용 정도의 작은 규모이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처럼 여러 난제에도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에 집착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옴.

#### 나. 미·북 관계

##### ● <北 "美, 한반도 핵위기 근원청산 용단 내려야">(4/30,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음.
- 이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신문이 매일 논평원 개인의 실명으로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논평원의 글'은 이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논평원의 글'에 대해 "대외관계 면에서 볼 때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 있는 글"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논평원의 글은 "우리가 핵을 회담탁에서 밀천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소리는 공화국의 진속을 모르고 하는 궤변"이라며 "우리의 초강경 대응조치들은 미제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핵공갈 책동에 중지부를 찍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종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강경위협이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 것임.
- 이 글은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



도,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한 것"이라며 "미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비핵화도 없다"고 밝혔다.

- 이어 "미국의 기도는 북침전쟁을 도발해서라도 우리를 압살하지는 것"이라며 독수리 연습에 B-52 전폭기와 B-2 스텔스 전폭기, 핵잠수함 등을 파견한 사실을 지적했음.

● <“카터, '북한 방문하고 싶다' 케리 국무장관에 편지">(5/2, 연합뉴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그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현지 외교소식통은 1일(현지시간)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케리 장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케리 장관의 반응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음.
-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북한의 초청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4월에도 '엘더스 그룹'의 일원으로 메리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음.
-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찾은 이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서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음.
- 하지만 엘더스 그룹의 북한 방문은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이른바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면담까지 했고 이를 계기로 그해 가을 제네바 핵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음.
- 카터 전 대통령은 또 2010년에도 북한을 찾아가 불법 입국죄로 북한에 수감돼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 씨를 데리고 귀국했음.
- 이에 따라 현재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도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 추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4월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 등을 감안할 때 미국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또 최종적으로 북한 방문이 성사될 지는 불투명함.
- 또 다른 소식통은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간다면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될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일"이라고 전했다.
-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추진에 대



해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북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 15년 노동교화형>(5/2,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에 대해 북한 정부에 "적대적 행위"를 한 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이 2일(목), 워싱턴주 출신 관광가이드인 배씨가 30일(화)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음.
  - 북한은 배씨가 저질렀다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은 그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려 했고 '꽃제비(노숙자를 일컫는 북한말)' 어린이들의 사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명목으로 억류됐을 거라고 말하고 있음.
  - 배씨는 지난해 11월말 투어그룹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특별경제구역인 라손에 들어간 후 곧 억류됐음.
  -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음. 한국 언론은 목요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배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
  -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배씨와 유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사면을 받아낸 일이 있음.
  
- <北신문 "美, 상대 존엄있게 해야 대화 가능">(5/2, 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일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바란다면 대화 상대인 우리를 존엄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조선은 이날 '대화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존엄 있는 주권국가이고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해도 평등한 관계에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엄연한 핵보유국인 만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에서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또 그 길만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의 유일한 길임을 미국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신문은 또 "미국이 우리를 깔보며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미국과 마주앉을 수 없으며 또 마주앉았댔자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 신문은 "미국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저들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라느니, '핵포기 의지'를 보이라느니 하고 떠들고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비논리적이며 자가당착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음.
  
- <北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개성공단 파국 주범은 미국">(5/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미국이 "개성공업지



- 구시업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실질적인 장본인, 진범인"이라고 주장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업지구에 뺀친 미국의 검은 마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서울에 기어들었던 미 국무부 부장관이란 자는 괴뢰들이 그 무슨 '중대조치'요 뭐요 하면서 공업지구 안의 저들 인원을 철수시킨 데 대해 '전적인 지지'니, '이해'니 하며 적극 부추켜댔다"며 "결국 개성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괴뢰들의 책동이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에 대해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임.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은 애초 추구하고 예상했던 (북한의) 체계적인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우리 체제를 와해, 붕괴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실현과 반공화국 압살전략의 도구로 악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음.
- 이어 "미국이 오늘에 이르러 개성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보려던 비열한 술책이 더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과 개성공업지구의 존재가 우리 겨레에게 6·15 시대에 대한 동경과 북남 협력사업에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덧붙였음.

#### ● <北, 케네스 배씨 사건 "정치적 흥정물 아니다">(5/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역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대미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가 배준호 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로 써먹으려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억측"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우리는 배준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그 누구도 초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그동안 일각에서 배 씨 석방을 위해 미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
- 대변인은 "지난 시기 미국 국민들이 우리 공화국의 법을 위반하여 역류될 때마다 미국의 전직, 현직 고위관리들이 평양에 직접 와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용을 베풀어 놓아주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배준호 사건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인도주의적 관용으로써는 미국인들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미국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으며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음.

#### 다. 중·북 관계

##### ● <핵실험 이후 주춤했던 북·중 민간교류 활기>(5/3, 연합뉴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육 등 민간 분야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
- 3일 제남시보(濟南時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주춤했던 북한 인사들의 방중과 중국 내 북한 예술품 전시회 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진창효 부교장과 최고교육위원회 홍성남 독학 등 예술교육계 인사 6명은 지난달 24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음악학원을 방문해 친선교류 활동을 진행했음.
- 이들은 중국음악학원의 학과 설치와 과목 개설, 학생 모집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교내 시설을 참관한 뒤 앞으로 두 대학 사이의 교수 및 학생 상호 방문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음.
-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서는 최근 '제1회 북한 예술품 전시회'가 개막됐음. 현지 매체들은 이번 전시회에 북한의 공현 예술가와 일급 예술가들의 우수 작품이 대거 출품됐으며 북한 미술품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좋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산둥성 문화청은 오는 4~9일 지남(濟南)시에 있는 성(省) 미술관에서 '북한 유화 정품 및 정관철 유작 전시회'를 개최함.
- 전시회에는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장을 지낸 고(故) 정관철 화가의 유작 30여점을 비롯해 홍철웅, 탁효연, 김영철 등 북한의 유명화가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임.
-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인 미술품의 해외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예술품 애호가들이 늘어난 중국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국제관광상품전에 참가해 미역, 담배, 꿀, 고추장 등을 전시·판매하기도 했음.
- 현지 대북 소식통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는 중국 내 대북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 <대북특사 계획없다는 중국...북한과 '냉랭'>(5/3,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과 위협공세로 지난해 말 중단된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좀



- 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나아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인 북중 관계 정상화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 도발의 명분인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달 종료되고 북한의 공세 수위도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관측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다름.
  - 유력한 대북 특사로 거론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2일 방중한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중국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소식통은 3일 "중국이 금명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중간 고위급 교류는 지난해 11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중단된 상태임.
  -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2월 3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평양 주재 외교단에게 철수 권고까지하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음.
  - 이와 관련, 중국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 채택을 찬성했을 뿐 아니라 해당 부처에 철저한 집행도 지시하는 등 '혈맹'으로까지 불리는 북중 관계는 상당히 결긋려 위진 상태
  - 중국의 특사 파견 등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려면 일정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 북한이 1차2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고위급 교류 재개로 북중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각각 1년과 5개월 정도가 걸렸음.
  - 일각에서는 과거보다 정상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 재가동 방침을 밝히는 등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중국과의 인식차는 과거보다 더 커졌음.
  -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과거 약속을 많이 뒤집어 놓은 상태"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 이처럼 북중관계 정상화가 늦어지면 한반도 정세 전환의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그러나 북중관계는 전략적인 필요성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한·미·중 3국의 연쇄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냉각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옴.



## 라. 일·북 관계

### ● <北, 日 개헌 움직임 비난... "전쟁헌법 시간문제">(5/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본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일본에서 전쟁헌법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 중앙통신은 이날 '극우익으로 맹질주하는 일본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를 지난 70여 년 전의 전쟁국가를 연상시키는 극우익 풍조로 물들이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제96조를 개정해 개헌 발의요건을 낮춰 헌법 9조를 개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이 통신은 "현 일본집권세력은 헌법의 제96조를 뜯어고치고 뒤이어 제9조를 완전히 개악함으로써 허울뿐인 평화헌법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침략무력을 세계 임의의 지역에 진출시켜 군사작전을 벌일 있게 된다"고 주장
- 이어 "일본의 급진적 우익화는 본질에 있어서 전쟁국가로의 질주"라며 "일본의 우익반동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동아시아를 훨씬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통신은 "되살아난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또다시 엄중한 전쟁의 재난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아베 정권의 추악한 모습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인민들의 커다란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는 개헌 발의요건을 '참·중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각각 과반수'로 바꾸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자위에 국한된 제한적 무력행사만 가능한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바꾸려고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개헌 절차를 담은 헌법 96조 개정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일본, 북일 정부간 교섭 조기재개에 의욕">(5/4,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중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북일 정부간 교섭의 조기 재개에 의욕을 표시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음.
-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상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본정부 주최로 열린 북한 일본인납치 문제 심포지엄 강연을 통해 "일본이 북일간의 가시를 스스로의 손으로 뽑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비핵화 문제에 앞서 북한과 납치문제를 먼저 협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그는 특히 미국정부가 비핵화 의사를 북한이 먼저 표시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미국도 (이런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중국의 대북 자세가 바뀐 것과 관련, "납치문제 해



결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도 표명했음.

- 그는 또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설사 비핵화 협의가 진전돼 대북 인도지원이 의제가 되더라도 일본정부의 지원은 곤란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음.

#### 마. 기 타

##### ● <새 6자회담 수석대표에 조태용 호주대사 내정>(5/2, 연합뉴스)

- 정부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조태용(57·외무고시 14회) 주호주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음.
- 현재 수석대표를 맡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의 공관장 인사에 따라 곧 주영국 대사로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 교체는 1년 6개월만임. 정부 관계자는 "임 본부장이 대사로 나가고 조 대사를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내정된 조 대사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단장으로 근무. 이후 북미국장, 장관 특별보좌관, 의전장 등을 역임했음.
- 조 대사는 균형잡힌 사고의 전략가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는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 조 대사의 후임으로 김봉현 전 다자외교조정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2011년 10월 임명된 임 본부장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임기 중 6자회담은 물론 남북 비핵화 대화도 한번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됐음. 그는 내정자 신분으로 2011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 배석했지만 그 이후에는 북측 대표와 별도로 회동하지 못했음.

##### ● <NPT 준비회의 "北 추가도발 자제 촉구">(5/3, 연합뉴스)

- '2015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네바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북한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요약문(Chairman's factual summary)이 채택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음.
-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결과문서인 의장요약문에서 "북한은 지역과 그 주변에서 안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의장요약문에는 △북한의 지난 2월 3차 핵실험 규탄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영변 핵시설 재가동 자제 촉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가 등의 내용도 담겼음.
- 참가국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 6자회담에 따른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른 시일 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의 완전한 이행도 촉구사항에 포함됐음. 의장요약문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외교부측은 전했다.
- NPT 당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직전 평가회의(2010년)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핵군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를 논의했음.
-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과 북한·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이르면 이달중 방위비 분담협상 개시>(5/2,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양측의 방위비 협상대사가 모두 정해졌으므로 좀 있으면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양측이 현재 회담 날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한미 양국은 국회 비준 등 국내 처리 절차를 이유로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정부 소식통은 "실무적으로는 이달 말 이전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을 체결해야 할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우리측 분담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임.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금을 정하겠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천 73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며 현재는 연평균 8천억 원 가량을 내고 있음. 1991년에서 2008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6.9배 증가했음.
  -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였음. 이는 일본(0.13%), 독일(0.07%)에 비해 높은 수치
  -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도 2004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음.



-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접적 지원혜택 등을 이유로 한미 양측 간에는 현재의 분담률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상황
- 분담률과 함께 협정 기간도 주요 논의사항임.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했으나 8차 SMA는 5년간(2009~2013년) 지속됐음.
- 국회 상임위는 8차 SMA 비준안 검토보고서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의 유효기간에 합의한 것은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
- 양국은 분담률 등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 <朴대통령 방미 영어슬로건 'Bound by trust...>(5/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5~10일 미국 방문의 영어 슬로건이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 동맹)'로 정해졌음.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는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 미래의 설계"라며 이 같은 영어 슬로건을 소개했음.
- 윤 대변인은 이어 "이번 영어 슬로건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미국인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압축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해 영어로 슬로건을 만든 것을 처음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가 영어 슬로건을 만든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외교 기조인 '신뢰'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됨.
-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정상회담이 향후 동맹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메시지라는 것임.
-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 영어 슬로건에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어 단어가 2개나 들어간 점도 주목됨.
-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미국 민주당의 선거캠페인 슬로건이 '앞으로(forward)'였고,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할 때 오바마 캠프는 '더 큰 단결(Greater Together)'라는 구호를 내걸었음.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together'라는 단어를 방한 기간 연설에서 즐겨 사용한바 있음. 지난해 3월 한국외대에서 가진 특별강연 말미에서 "we stand together, we work together, we go together"라고 한 뒤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며 연설을 마무리했음.



● <朴대통령 오후 미국 향발...뉴욕에 첫 기착>(5/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후 취임후 첫 해외 정상외교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 서울공항을 출발한 박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각) 뉴욕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 뒤 옛새동안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
-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60주년과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를 맞아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외교적 목표를 두고 있음.
- 박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
-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발전 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고,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임.
-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이면서도 미국 의회 초청을 받아 이례적으로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서는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이 함께 해 온 지난 60년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화문화 발전상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워싱턴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 워싱턴에서는 알링턴 국립묘지 및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김용 세계은행총재 접견,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 경제사절단과 조찬,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라운드테이블 오찬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한중 FTA 협상 '원산지·통관절차 기본지침 합의'(4/29,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원산지와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양국은 지난 26~28일 중국 허얼빈에서 5차 협상을 벌였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위지엔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나왔다.
-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된 것임.
- 우 실장은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원산지와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본 틀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텍스트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두 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경쟁, 지적재산권, TBT(무역 기술장벽), SPS(동식물 위생검역규정),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의 논의를 계속했음. 또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환경분야 전문가회의가 개최됐음.
- 한중 양국은 각각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에서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상호 간에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 중국 측 위지안화 협상대표는 "FTA의 모멘텀(momentum, 추진력)을 잃지 말자"고 말했다고 우 실장이 전했다. 양측은 비공식자리에서 엔저로 인한 양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상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는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고 무엇을 담을지 바스켓, 기본 틀을 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 향후 품목별 협상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임.
- 우 실장은 "농산물은 매우 예민한 분야로 협상에 앞서 국내 농림·축산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협상에 임했다"며 "개별 품목에서는 아직 중국 측과 이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우 실장은 중국 측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난색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협상의 기본전제가 포괄적 자유화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화엔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음. 한편, 6차 협상은 6월 말 또는 7월 초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음.

#### 다. 한·일 관계

##### ● <日규탄결의안 국회통과 "망동망언 중단해야">(4/29, 연합뉴스)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각료·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
-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음.
- 국회는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 깊이 인식하고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늑장 처리' 지적을 받아왔음.
- <일본,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반대>(4/29, 연합뉴스)
- 최근 시작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3국 FTA 교섭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중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 일본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정치적으로도 무역 규범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현재 북한 제품에 대해 전면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 영토 안에 있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외화획득을 돕는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으로 보임.
  - 지난 15일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서는 양국이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음.
  - 앞서 작년 시작된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협의한다는데 두 나라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통일부는 지난 18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주미 일본대사 "과거사 후회사과 이미 표명했다">(5/2, 연합뉴스)
- 사사에 켄이치로(佐佐江賢一郎) 미국 주재 일본대사는 1일(현지시간) 최근 과거사 논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미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 사사에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독자 투고(Letter to the Editor)'에서 "일본 정부는 깊은 후회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밝혔고, 2차 세계대전 희생자에 대한 진실한 애도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최근 이런(후회와 사과의) 뜻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중을 완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항상 역사를 정면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그런 노력은 역사의 개별적 사실을 조사하는 역사학자나 지



- 식인들이 이룬 성과에 의해 촉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어 사사에 대사는 "일본이 과거사에서 배운 교훈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를 건설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 그는 "한국과 다른 이웃국가들은 일본의 소중한 파트너"라면서 "일본은 책임있는 민주국가로서 이웃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기고문은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아베 총리의 이른바 '침략 망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사실을 실은 데 대한 '반론' 차원에서 이뤄졌음.
  - 신문은 이날 사사에 대사의 기고문과 함께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사는 일본인의 '과거사 반성' 독자 투고문을 나란히 게재했음.
  - 일본에서 태어난 6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키 헤닌저 씨는 "우리는 일본이 원자폭탄의 희생자일 뿐 원폭을 초래한 전쟁의 핵심 가해자라는 사실은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했음.
  - 그는 "이곳에서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등을 만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전쟁 때 저지른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에 사는 나의 동시대인들이나 언론은 이런 이슈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내 일본 친구들과 나는 일본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 <“한일·일한협력위 50주년 기념식 연기”>(5/2,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로 이뤄진 한일·일한협력위원회가 양국관계가 악화된 탓에 올해 일본에서 열려던 50주년 기념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일한협력위원회(회장 나가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1일 회원들에게 "한국 측과 거듭 협의한 결과 제반 사정에 따라 이번에는 (50주년 기념식)을 연기하고, 나중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통지했음.
- 한일협력위원회(회장 남덕우 전 총리)와 일한협력위원회는 오는 20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50주년 기념 합동 총회 및 합동 리셉션을 열고 결의내용을 양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음.
- 산케이신문은 "일한협력위원회는 '제반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음.
- 일한협력위원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65년 한일 국교 재개 후에 만든 단체로 역대 총리 경험자들이 회장을 맡아왔음. 현재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가 회장 대행을 맡고 있음.

#### ● <“일본정부, '아베발언' 파문 조기수습 도모”>(5/4, 연합뉴스)

-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침략 정의 발언 등을 둘러싼 국



내외 파문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야당의 질의가 있을 경우 총리 발언의 진의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침략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한국, 중국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음.
-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발언이 "표현부족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정부 소식통)고 보고 앞으로의 국회 답변에서는 내각의 견해를 사전 조율한 후 대응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라. 미·중 관계

### ● <중국 반체제인사 천광청 조카 맹장염 악화>(5/4, 연합뉴스)

- 미국에 망명한 중국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의 조카 천커구이(陳克貴)가 교도소에 수감된 채 맹장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음.
- 천광청 망명 이후 그의 가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 문제는 미국과 중국간 주요한 외교적 마찰 요인이 되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천커구이의 부친 천광푸(陳光福)는 지난 2일 산둥(山東)성 린이 교도소에 천커구이의 치료를 위한 보석을 재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 천커구이의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도소 당국은 맹장염이 큰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커구이의 보석을 거부했으며 위생실에서 침 등으로 자체 치료를 해 감염으로 인한 낭종이 생기고 화농이 심해지는 등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천광푸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거친 식사와 힘든 노동 때문에 맹장염에 걸린 것 같으면서 맹장염 수술 적기를 놓쳐 생명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국 당국은 천광청이 주중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후 그 보복으로 천커구이를 수감한 외에 그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 천커구이는 작년 5월 가택 연금 중이던 천광청이 탈출한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공안에 흥기를 휘두르며 대항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3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임.
- 린이시 난(南)현 동스구(東師古)촌 주민들은 당국의 사주로 문화혁명 때의 '소자보(小字報)' 비판 형식으로 천광청 가족을 매국노 집안으로 몰아붙이며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 한편, 미국 국무부는 천커구이의 인권 탄압 상황과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음.
- 패트리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3일 기자 회견에서 존 케리 국무장



관이 이날 천커구이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그는 왕 부장과 계속 통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 미·일 관계

##### ●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일본국익 해칠 것">(5/5, 연합뉴스)

- 토머스 시퍼 전(前)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할 경우 "미국에서의 일본 국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시퍼 전 대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관계 심포지엄에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음.
- 닛케이의 시퍼 전 대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를 표한 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는 미국과 역사인식 문제로 자리매김시킨 일본의 입장 차이는 선명하다"며 고노담화 수정 노력이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미일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음.
-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일본이 고노담화 때문에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며 담화 수정 의사를 밝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총리가 된 이후에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음.
- 그러나 아베 총리는 최근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리아마(村山)담화와 관련해 "침략의 개념은 확정돼 있지 않다"며 수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역사인식을 둘러싼 파문을 일으켰음.

#### 바. 미·러 관계

##### ● <"입양절차 중단된 러 아이들 미국행 허용해달라">(5/2, 연합뉴스)

- 러시아의 아동 전문의들이 자국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개서한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으로 보내면서 해외 입양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음.
- 1일(현지시간)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작성한 공개서한에서 미국인 양부모 희망자들과 오랜 기간 접촉하며 감정적 유대 관계를 형성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미국인 입양 금지법 제정으로 미국행이 좌절된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음.
- 의사들은 "미국인들과의 오랜 접촉을 통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미래의 양부모들과 친밀해지고 그들을 엄마와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 어린 아이들이 또다시 배신과 버림을 경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의사들은 이어 "모든 것을 잃은 고아들에게 이미 가까워진 미국인 양부모 희망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이들의 정상적 심리 성장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공개서한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인 아동 심리 전문의 알렉산드르 벵게르는 "미래 양부모들과의 관계 단절이 아이들에게 친부모 사망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며 이들의 미국행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음.
- 의사들의 공개서한은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이 최근 편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크렘린궁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 러시아 당국은 올 1월부터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대미(對美) 인권법이 발효한 이후 법 발효 시점 이전에 법원 판결 등의 입양 절차를 마친 아이들에 대해서만 미국행을 허용하고 있음.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미처 판결을 받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은 입양이 좌절되고 말았음.
-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말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을 채택했음.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 차원. 이 법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새해 첫날부터 발효됐음.
- 러시아 아이들의 미국 입양 길이 막히면서 러시아 국내외에선 양국의 정치 갈등 와중에 죄없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미국은 러시아 고아를 입양해온 주요 국가로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는 모두 4만5천여 명에 이룸.

#### 사. 중·일 관계

##### ● <중국, 일본의 '견제외교' 강화에 긴장>(4/30,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대만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 경제를 위한 외교적 보복을 확대하는 데 대해 긴장하고 있음. 일본과 대만이 지난 10일 체결한 어업협정은 빠르면 5월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신문망이 30일 전했다.
- 이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대만 어민들이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고 대만 당국은 자국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순시선을 파견할 수 있게 됨.
- 일본은 대만과 어업협정 체결로 센카쿠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에서 대만에 선물을 안겨준 것은 양안 관계를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담긴 '이



-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음.
- 중국은 이런 의도에 넘어간 대만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센카쿠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본에 전쟁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중국이 최근 센카쿠 12해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항해하며 주권시위를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의 센카쿠 해상 시위를 계기로 공세를 강화한 것 역시 일본 압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은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하고 양국간 외교·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음.
  - 중국은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주요 목적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중국은 일본의 접근에 러시아가 호응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판도에 미묘한 기류가 생겨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국 순방을 통해 중국 견제망을 두텁게 쌓았음. 특히, 베트남과는 중국과의 해상영유권 갈등에서 공조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음. 일본은 이와 함께 필리핀에 구축함 등 군사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 자국을 둘러싼 주변국과 접근을 강화하는 데에는 미국의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중국 포위망을 쌓으려는 미국과 중국 견제가 시급한 일본의 입장이 합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일본이 대만, 동남아 국가와 관계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중국은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공세에 대응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30일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 개국을 순방하며 무역 및 투자 확대, 국제문제 공조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中 "美, 日국수주의 우려해야"...日 "개헌은 우리 일">(5/2, 연합뉴스)
- 센카쿠 문제와 일본 내 국수주의 대두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미국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음.
  - 중국 측이 일본의 국수주의 대두에 미국도 주변국처럼 우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직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의 반응은 개헌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1일(현지시간) 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개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이기예, (한국이나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헌법 96조를 개



- 정하고 나서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복안임.
- 일단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의 발언에 앞서 미국 주재 중국대사인 추이텐카이(崔天凱)는 1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만큼 일본 내 국수주의의 대두를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나온 발언임.
  - 추이 대사는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관할권을 침범하는 어떠한 일방적, 강제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사실과 시비 관계가 명확하다"며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긴장을 조성한 것도, 일방적이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 추이 대사는 헤이글 장관의 발언이 최근 중국을 찾은 마틴 템프시 합참 의장의 발언과도 상충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센카쿠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음.
  - 템프시 의장은 중국에서 미국은 센카쿠 분쟁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외교부는 추이 대사 회견 후 관련 언론발표문을 통해 추이 대사가 최근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각료의 집단참배를 거론하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이런 행동 모두가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소개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추이 대사가 "미국 측도 일본 정치인이 일으킨 도발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 다른 당사국이 일본을 도우려다 돌을 제 발등을 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이듬해인 1895년 주인 없는 무인도라고 주장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직접 관할하다가 1972년 센카쿠 열도와 함께 일본에 돌려줬음.
  -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센카쿠 관할권을 행사했다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빼앗아간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넘긴 미국이 센카쿠 분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을 펴왔음.
  -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국은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이 섬들을 일본이 행정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미·일 방위조약에 포함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하지만 중국이 이에 드세계 항의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됨.



## 아. 일·러 관계

- <러시아, 쿠릴 열도 일본 반환 전망은 여전히 미지수>(5/1, 연합뉴스)
  - 일본 최고지도자로는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를 떠났음.
  - 아베 총리가 러시아 방문에서 거둔 최대 성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재개하고 양국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임.
  - 두 합의는 일본이 그동안 영토 문제 해결을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온 만큼 서로 연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 전문가들은 일단 그동안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절대 반환 불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협상 시작을 선언한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가 수용할 만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쿠릴열도는 그동안 러시아-일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왔음.
  - 양국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을 겪어왔음.
  -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그사이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쿠릴열도 협상은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음.
  -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던 협상은 푸틴이 지난해 3기 취임 전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이고 모리 전 일본 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음.
  - 푸틴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직전 일본 아사히 신문 주필이 참여한 외국 언론사 대표들과 회견에서 쿠릴열도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승리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되고 타협을 해야한다"면서 "이 문제는 유도의 '히키와케(무승부)'와 비슷한 것이다"고 무승부론을 제기했음.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
  - 뒤이어 지난 2월 일본 정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모리 전 총리는 모스크바의 '국제관계대(MGIMO)'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무승부론'을 상기시키면서 영토 문제 협상은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리 특사는 어느 한 편이 4개 섬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결국 같



-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음.
-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안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해결' 방안도 소-일 공동선언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남단의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을 일본에 돌려주는 방안임.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실현까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푸틴도 양국이 타협안을 찾으려면 우호적 환경과 신뢰 분위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모스크바의 정치공학 센터 부소장 알렉세이 마카르킨은 푸틴과 아베 간 쿠릴열도 합의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면 양측의 입장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 반환 불가 입장에 기울어 있는 국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선 일본이 대규모 대러 투자 등 합당한 대가를 러시아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